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진보당		
정책번호 1	검찰개혁 정치개혁	분	야* 정치
<p>○ 목 표 : 검찰개혁, 정치개혁</p> <p>○ 이행방법</p> <p>①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수사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청 해체, 기소청 전환 및 수사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 전환 관련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 독립적 '수사청' 신설. 현재 검찰의 2대 중요범죄 수사업무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행하는 수사업무를 이관받아 담당 <p>② 검사장 직선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검사장 직선제 도입 관련 법 개정 : 18명의 지방검사장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검사동 일체를 만들었던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 구조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지방분권도 강화. - 지방선거와 동시에 현행 교육감 선거에 준하여 시행하고 임기는 4년 <p>③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개정 :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는 경우, 상위 2명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 진행(신설) - 헌법 개정 : 헌법해석의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헌법에 결선투표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p>④ 국회의원 3대 특권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3배 이하'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제2조) : 국회의원 수당은 '최저임금 3배 이하'로 명시하여,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함. -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으로 공직사회 개혁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공직자윤리법 개정 :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확립 및 투기 방지 <p>○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기시작 상반기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진보당		
정책번호 2	가계부채 해결	분 야*	재정경제
<p>○ 목 표 :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결</p> <p>○ 이행방법</p> <p>① 은행 횡재세(초과이익세)로 서민부채탕감기금 조성하여 서민 부채탕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은행 횡재세(초과이익세) 신설,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이익시, 초과이익의 50%를 부과징수 -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여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재조정 (원금·이자 조정 및 탕감) 실행 - 1단계 시행 대상으로 DTA(자산대비부채비율) 100% 이상, DSR(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70% 이상 가구 중 저소득(소득1~3분위) 위험가구로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등에 집중 지원 <p>※ 법인세법 및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개정</p> <p>② 법정 최고금리 연 15%로 낮춰 대출금리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5% 이내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 해결 <p>*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p> <p>③ 대출금리 원가 공개로 금리부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법 개정으로 △가산금리 별도 공시 △가산금리 산정 세부항목 공시 △예대금리차 증가시 개선을 명문화하여 대출금리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 합리성과 적정성을 확인 - 은행 횡재세 산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를 강제함 <p>※ 은행법 개정</p> <p>④ 불법 대부계약 및 불법사금융 원천 무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면 최고금리 초과금만 무효로 규정함. 			

- 대부업법을 개정, 불법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이자는 물론 원금계약까지 무효화
- 불법사금융의 불법채권추심 근절
- ※ 대부업법 개정

○ 이행기간

- 임기시작 상반기

○ 재원조달방안 등

-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은행 횡재세(초과이익세) 신설,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이익시, 초과이익의 50%를 부과징수
-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여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과감한 채무재조정(원금·이자 조정 및 탕감) 실행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진보당		
정책번호 3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해소	분	야* 재정경제
<p>○ 목 표 :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 해소</p> <p>○ 이행방법</p> <p>1. 초자산가 부자 증세</p> <p>① 자산 100억 상위 0.1% 초자산가 부유세 도입</p> <p>○ 자산 100억 이상 2%, 자산 300억 이상 3% 부유세 부과</p> <p>- 2023년 금융자산 100억 이상은 3만 2천명 총자산 558조, 300억 이상은 9천명 총자산 1,128조</p> <p>- 자산 100억 이상 2% 300억 이상 3% 부과 시, 연간 44조 이상 재원 확보</p> <p>②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p> <p>○ 은행 및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윤에 횡재세 부과</p> <p>- 은행(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20% 초과분, 초과이익에 단일세율 50% 적용</p> <p>- 석유·가스 등 에너지 기업 5년 평균 수익 대비 20% 초과분, 초과이익에 단일세율 50% 적용</p> <p>③ 상속세 강화</p> <p>○ 상속세 최고구간 세율 인상</p> <p>- 현행 상속세 세율 ▽과표구간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p> <p>이 중 최고구간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90%의 세율 적용</p> <p>○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하향</p> <p>2. 자산재분배 공약</p> <p>①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수당 월 30만원 지급</p> <p>○ 아동수당 0세 18세까지 월 30만원 지급</p>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7세→18세 확대, 학생이나 직업훈련 중이면 20세까지 지급
- 아동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 10만원 → 30만원 상향, 저소득층은 '아동수당 보조금' 추가 지급

② 청년, 신혼부부 주거 보장

-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만원 주택' 공급 : 보증금 0원, 월 임대료 1만원 공공임대
-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공급 :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 30% 수준 공공임대
- 신혼부부 특화 공공자가 공급 : 토지는 공공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20평 1억대 건설원가 아파트
- 첫아이 가족주택 공급 : 첫째 아이부터 24평형 공공임대

③ 1주일에 3일을 잘 놓고 쉬자

- 주4일제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
- 내일배움카드(500만원) + 내일휴식카드(500만원) 지급
- 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 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 내일휴식카드 : 문화 예술 여행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 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④ 노인에게 월 50만원 지급

- 65세 이상 기초연금 월 50만원까지 지급
- 소득 70% 이하 노인 40만원, 소득 40% 이하 50만원 지급

○ 이행기간

- 임기시작 시

○ 재원조달방안 등

- 초자산가 부자증세(고자산가 부유세·상속세)
- 은행 및 에너지 기업 초과이윤 횡재세 부과로 재원마련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진보당		
정책번호 4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	분 야*	환경·산업자원
○ 목 표 : 공공성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 및 민중이 주도하는 기후정치 대전환			
○ 이행방법			
①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이용권			
- 에너지법 개정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 에너지기본권 보장, 재생에너지 전환 위한 지원 명시			
· 필수에너지량 무상공급 위한 필수량 산정			
· 에너지위원회에 이용자 및 노동자, 공급시설 주변주민, 지자체 참여			
- 전기사업법 개정			
· 전기사업 공공성 확보 방향 명시			
· 산안부장관이 필수전기량 산정, 전기사업자에 필수량 무상공급 의무 부과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 산안부장관이 필수가스량 산정, 도시가스사업자에 필수량 무상공급 의무 부과			
- 수도법 개정			
· 수도 민간위탁 요건 강화			
· 환경부장관이 필수수도량 산정, 일반수도사업자에 필수량 무상공급 의무 부과			
- 주거기본법 개정			
· 최저주거기준에 한파·폭염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 수준 명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최저주거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의무 부과			
· 임차주택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계약시 알리지 않으면 차임 1/2 감액청구			
② 화석연료·핵발전 퇴출,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			
-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 탈탄소 전환 과정의 모든 노동자 '기후일자리'보장			
·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 노조법 개정을 통한 산업별·업종별 협약 실현 등			
- 탈핵기본법 제정, 원자력 진흥법 폐지, 핵발전소 조기 폐로			

-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실현
- 발전공사법 제정,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및 민간협력업체 재공영화 추진

③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 대중교통의 단계적 공영화 추진

- 청소년 무상교통 전국적 실현
- 교통기본법 제정, 교통체계 통합, 공공교통 대전환

④ 신공항 건설 반대, 공공철도 강화

- 신공항 건설 추진 중단, KTX-SRT철도 통합 공영화 실현
- 전국 모든 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 및 건설 중단.
- KTX-SRT 통합, 수서발 KTX 도입, 철도민영화 시도 중단

⑤ 탄소세가 아닌, 조세개혁과 공공성 강화

- 온실가스 주범인 기업에 법인세 추가 부과하여 책임을 강화
- 세수의 활용이 '보편적 복지'와 '민중으로부터의 전환'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함.

⑥ 동아시아 평화구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⑦ 2030년 폐기물 50% 감축, 발생지 처리원칙 강화

⑧ 난개발 저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 이행기간

임기시작시부터~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진보당		
정책번호 5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전국민 4대보험	분 야*	보건복지
<p>○ 목 표 : 전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전국민 4대보험 실현</p> <p>○ 이행방법</p> <p>① 국민연금 : 누구나 노후 보장 1인1연금</p> <p>○ 전 국민 국민연금 당연 가입 추진</p> <p>- 18세가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 당연 가입 : 일용 또는 초단시간,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 기본 가입기간 10년 보장</p> <p>○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도 4.5%만 부담</p> <p>○ 모든 노동과 사회적 기여에 가치 인정, 크레딧 소급 인정</p> <p>- 양육크레딧 : 현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 자녀당 최소 3년 크레딧 인정</p> <p>- 돌봄크레딧 : 가족 돌봄자는 돌봄 책임으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와 무급 돌봄의 불이익을 겪고 있어, 이들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돌봄 트레딧 신설(최대 10년 가족중 1인/평균 소득월액 기준 보험료 국가 지원)</p> <p>- 국민연금법 시행 이후 군복무, 양육 등 크레딧 소급 적용</p> <p>○ 혼인 중에도 분할연금 수습, 유족연금수급자 재혼시에도 수급권유지</p> <p>○ 적정 수준이 보장되는 수급액으로 지원</p> <p>- 기초연금 인상 및 저소득층 추가 지급, 생계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전액공제</p> <p>-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장애연금 확대, 외국인도 반환일시금 지급</p> <p>○ 국민연금 예상 보험료 수입의 50%, 기초연금의 70% 이상 국고 투입</p> <p>- 사업장 가입 지원,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 지원</p> <p>②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 간병비 지원</p> <p>○ 직장가입 사각지대 해소</p> <p>-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을 모두 직장가입으로 포괄하는 근거 조항 신설</p> <p>-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의무, 불이행시 제재 규정 마련</p> <p>- 피부양자 자격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생활동반자 관계 포함</p> <p>○ 상병수당 실시</p> <p>- 가입자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외</p> <p>- 사업장에서 상병휴가를 쓸 수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급 상병휴가 기간</p>			

종료 후부터 지급

-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보수월액)의 60%,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의 60% 지급
- 위 금액이 최저임금 이하면 최저임금의 80% 지급
- 돌봄지원 제공 : 미성년 자녀, 장애인, 중증환자, 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돌봄지원제공, 돌봄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 지급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추가: 요양급여에 간병비 항목 추가

③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예술인등 자영업자도 동등 보장
- 구직급여 수급자 확대
 - 일반 근로자, 36개월 동안 120일 보험료 납입으로 요건 완화
 - 초단시간 노동자,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비례적 보장 취지에 맞게 조정
 - 자영업은 기준기간만 현재 24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
- 가족돌봄휴직 등 급여 신설
- 이직과 충전을 보장하는 신설
 - 부분실업급여 도입,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이직준비급여) 허용, 사용빈도 제한
 - 청년 이직준비급여 보장(수급기간 연장, 횟수제한 없는 이직준비급여)
 - 재충전 급여 신설(8년마다 90일씩, 기초일액 90% 고용보험에서 지급)
 -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발생시, 소득지원급여 지급

④ 일하는 모든 사람 적용받는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산재보험 포괄 : 직종 구별없이 적용대상으로 포함
 - 피보험자격에 관한 확인청구절차와 불이행시 제재규정 마련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 제외, 휴업급여 최저임금액만큼 보장
- 적용제외 대상은 없애고 적용대상은 확대
 - 가구내 고용 제외 조항의 삭제, 농어업, 산림업 등 개인 고용 5인 미만 사업자 제외 규정 삭제, 사업주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특례조항 신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 중 재혼 또는 사실혼의 경우도 포함
- 요양 후에도 온전히 일터에 복귀

○ 이행기간

- 임기시작시부터 단계별 추진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진보당		
정책번호 6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책임제	분 야*	보건복지, 노동, 교육
<p>○ 목 표 :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돌봄국가책임제 시행</p> <p>○ 이행방법</p> <p>①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의무 규정 - 돌봄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휴가 보장 - 가정 내 돌봄책임 분담을 유도하며 돌봄차별 금지 - 돌봄민주주의 실현 <p>②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할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지원체계 마련 - 돌봄자(공식, 비공식)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경제적·정서적 지원체계 마련 - 돌봄수요자 지원 및 권리 : 어르신 이동지원 확대, 치매가족지원센터 확대 등 - 돌봄노동자 지원 및 권리 : 돌봄노동 적정임금 보장 규정, 돌봄노동의 경력 인정, 최소 근로시간 보장, 유급휴가와 퇴직급여 보장, 야간근로 제한과 휴게시간 보장, 노정교섭 법 제화, 업무상 재해 및 인권보호 - 비공식돌봄자 지원 및 권리 : 비공돌봄자수당 현금 지급 및 비공식돌봄자 연금, 휴가지원 <p>③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통합돌봄</p> <p>㉠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 법률 개정 :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 의무화 - 대통령령 개정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 추가 - 광역·기초 공공병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 - 광역 시·도별 공공요양병원, 공공재활병원, 공공어린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건립 추진 <p>㉡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시군구에 한 개 이상씩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산모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 			

-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상담과 준비
 -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전문인력 및 감염예방 교육 강화
 - 젠더관점을 가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 설치
 - ㉔ 국공립보육시설 50%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국공립보육시설 단계적으로 50%까지 확충, 신축 및 지역 유휴 시설 활용, 지역별 편차 해소 위해 신축시 지원되는 비율을 차등 지원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㉕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
 -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와 열악한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 아침돌봄, 방과후돌봄, 저녁돌봄, 방학 중 전일제 돌봄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 ㉖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및 월 30만원으로 증액
 - ㉗ 20~40대 1인가구 맞춤형 돌봄 체계
 - 사회보장체계 개선으로 1인 가구 사회보장제도 강화
 - 긴급호출서비스 확대: 긴급상황(안전, 건강위기) 시 호출기 누름으로 주민센터와 연결 경찰, 구급대 동시 출동
 - 주거지 중심 공동생활 서비스 확대 : 지역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주거지 가정의학과 연계 육체뿐 아니라 정신건강 수시로 상담, 주민센터와 연계 함께 쓰는 부엌, 반찬 나눔, 공동 세탁소 등 1인 가구 공유 서비스 활성화
 - ㉘ 사회서비스원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 사회서비스원 직영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시설을 전 시설 대비 30% 확충
 - 민간위탁 종료 시설 우선적으로 직영 전환
 - ㉙ 노인돌봄체계 강화
 - 생계급여 수급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
 -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 설치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충
 - 요양 돌봄 서비스,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거주지원 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 거주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 ㉚ 장제비 지원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 이행기간
임기시작시 상반기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진보당		
정책번호 7	집 걱정 없는 나라	분야*	행정자치 건설교통 보건복지
<p>○ 목 표 :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 해결</p> <p>○ 이행방법</p> <p>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p> <p>○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건설원가아파트와 장기공공임대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택지의 50% 이상을 민간에 매각.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으로 원천적으로 토건세력과 부동산투기카르텔 근절 <p>○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만원주택’ 공급 : 보증금 0원, 월 임대료 1만원 공공임대</p> <p>○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공급 :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 30% 수준 공공임대</p> <p>○ 신혼부부 특화 공공자가 공급 : 토지는 공공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20평 1억원대 건설 원가 아파트</p> <p>○ 첫아이 가족주택 공급: 첫 아이부터 24평형 공공임대 제공, 생활동반자에게도 공급</p> <p>○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지정(20%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기도, 광역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함 - 미분양 아파트 및 전세사기 주택 국가매입 후 공공임대로 제공 <p>② 완전한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보호 3법</p> <p>○ 공정임대료 제도(최초 공정임대료 산정, 매년 도시별 인상률 상한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거주하지 않는 모든 임대용 주택에 대해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별 주택 공시가격제도처럼 전월세 가격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건물주가 마음대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함. - 지역별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임대료를 결정 고시함. <p>○ 전월세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p> <p>○ 모든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임대주택은 (재)계약시 해당기간 전월세 인상률 범위내에서만 전월세 가격을 정하도록 함. - 임대료 인상률은 전월세가격, 물가인상률, 소득증가 등 지역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임대료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함(시도 의회에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③ 주택거래허가제_다주택자 주택취득제한

○ 주택거래허가제

-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다주택자 주택 취득제한, 공공기관 주택선매권 행사
- 갭투기 금지 ; 주택구입자금중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비중 50% 이상인 경우 거래 제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 토지취득자금 조달.이용계획 신고

○ 다주택자 주택취득제한

-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수도권과 대도시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취득 제한
- 1가구 1주택인 경우 이사, 세대분리를 위한 증여 목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은 주택거래허가제를 통해 구입

○ 다주택자,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다주택자 담보대출 금지 특별법 제정

○ 다주택가구 조세감면 제도 전면 폐지

-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정비

○ 이행기간

임기시작시 ~

○ 재원조달방안

- 토지임대부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료 받음. 이 경우 임대료 책정은 이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의 '해당 공공택지 조성원가에 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할 금액'을 준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출
- 신도시는 공영개발로 상업용지, 업무용지만 일부를 매각한 후 조성 비용을 조달하되, 주거용지는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과 국가가 참여하는 방식.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되 건물만 분양(토지임대부 건설원가아파트)하거나 건물도 임대(장기공공임대), 즉 '건설원가아파트+장기공공임대=100%공공주택' 공급
- 필요한 부지 연 100만 평, 2010년 이후 LH공사가 매각한 공공택지 총1,270만평으로 연간 140만 평 수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으로 공공보유 토지에서 중심으로 공급.
- 현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 중에서 공공분양주택 및 민간분양 주택 용지와 부지가 확보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을 전환하면 연간 10만호 공급 가능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제도 마련
-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에 충족한 지자체나 공공임대주택 공가가 많은 지역에서는 의무비율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지역에서는 각종 재개발, 개건축사업 인허가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제도화함.
- 지자체 등 공공기관 주택선매지역 지정을 통한 공공주택확보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진보당		
정책번호 8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분 야*	안전, 여성, 노동, 과학기술정보통신
○ 목 표 : 모든 국민의 인권, 평등권을 보호·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이행방법			
① 성평등노동기본법으로 첫 노동에서 퇴직까지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 채용성차별 금지			
㉡ 배제없는 육아휴직제와 남성육아휴직할당제 도입			
㉢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바로복직제’실현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100인 이상 기업부터 ‘성평등지표’평가 시행. 기준 점수 미달 시 총급여액의 1% 벌금 징수			
②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및 여성폭력방지법 개정			
○ 젠더 기반 폭력(권력에 의해 신체적·성적·심리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원스탑 시스템			
○ 위계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지원을 종합적으로·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			
○ 여성폭력방지법 개정			
○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 법률 개정			
○ 혐오표현방지법 제정			
○ n번방 방지법 개정			
- 디지털성폭력 범죄 인식 교육의무화 및 디지털성폭력피해지원 체계 개선			
- 사이버성폭력 산업화 문제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강화			
○ 그루밍 성범죄(성인) 신설			
③ 차별금지법, 평등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동반자법 제정 : 민법·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 240여개 현행법 정비, 특정인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주택지원 정책에서 법률혼과 같은 지위 부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가구당 지원기준 적용하여 지원
- 파트너 인증서 발급 :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거주하는 성인 2인의 결합 관계 대상, 주택, 의료 혜택 등에 활용, 성별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우팅으로부터 보호
- 성소수자 인권보장,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시행 강화, 민주유공자법, 노동허가제, 동물권·채식권 보장 등

④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안 마련.
 -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패키지 법안 제정
 - 평상시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구축
 - 사회적 참사가 일어난 경우, 조사·진상규명 등 프로세스가 신속히 작동하는 안전체계 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
 -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 산업안전청 설립
 - 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청 설립 추진
- 이행기간
임기시작 즉시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진보당			
정책번호 9	일과 삶의 균형,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	분	야*	노동
<p>○ 목 표 : 임금 삭감없고, 차별없는 주 4일제 전면적 도입</p> <p>○ 이행방법</p> <p>○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산업별 위원회) 구성, 종합적 수립·집행 - 법정근로시간 주 3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제한, 연 1700시간 초과 금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교대제, 야간노동 최소화 및 일자리 확대와 연결(100만 일자리 창출) -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폐지 <p>○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 근로 인가 규제</p> <p>○ 5인 미만, 민간 중소기업에 임금보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는 등 재원 마련 - 근로시간 단축이 절박한 5인 미만 사업장 및 민간 중소기업에 임금보전을 지원하여 임금 삭감없는 주4일제 우선 도입 <p>○ 5시 퇴근법으로 점심시간, 휴게시간 유급화</p> <p>○ 내일배움카드(500만원) + 내일휴식카드(500만원)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 내일휴식카드 : 문화 예술 여행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p>○ 이행기간</p> <p>임기시작시 ~</p>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진보당		
정책번호 10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심장	분 야*	행정자치, 재정경제
<p>○ 목 표 :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p> <p>○ 이행방법</p> <p>①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금고 역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신용창출을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에 주력하고, 사회적기업 등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재투자 확대 - 제2~3의 금융중심지인 부산과 전북에서부터 지역공공은행 설립 추진 <p>※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공공은행 설치 및 운영 <p>② 지역재투자법 신설로 지역내 순환경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 지역 저소득층 및 소기업 대출수요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한 지역재투자법 제정 -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은 개별 금융기관의 지역내 대출, 투자, 금융서비스 정도 평가반영하여 국내지점 설치, 본점, 지점 이전 합병 통합 인허가 기준제시 <p>③ 재생에너지 ‘지역공영화’ 촉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방향이 이용,보급의 촉진에서 공동체, 생태계 공존의 방향으로 공영화 원칙 수립.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을 목적으로 분명히 한다. - 재생에너지 ‘지역공영화’ 실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본법 마련. <p>○ 이행기간</p> <p>임기시작 상반기</p>			